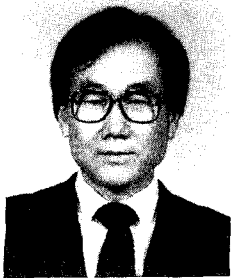


지역이기주의 현상에 대하여



김 동 민 /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남비(NIMBY, not in my backyard의 약자)란,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것이 내지역에 들어서는 것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혐오시설(嫌惡施設)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기피증이다. 혐오시설이란, 요즘 그 입지계획을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시끌벅적한 핵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해물질배출공장등 잠재적 위해시설로부터 고속도로나 공항과 같이 쾌적한 주거환경에 손상을 끼치는 시설, 그리고 분노처리장이나 화장터, 형무소처럼 말 그대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남비현상은 민주화시대로 접어들어 제6공화국초기 때부터 나라의 여기저기서 봇물터지듯 하여, 그간의 국가계획에 차질이 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민주화바람과 함께 일기시작한 국민들의 욕구분출, 지역이기심, 환경보전운동등과 얽혀서, 정부의 입장을 더욱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

를 살피건데,

1989년부터 홍천(洪川)댐 건설반대운동

1989년부터 동양화학 TDI군산(群山)공장 철거운동

1990년부터 부산(釜山)반송동 산업쓰레기매립장 반대운동

1990년 안면도(安眠島)핵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1990년부터 화성(華城)산업쓰레기처분반대운동 등이 있다.

그렇다면 그전에는 그러한 현상들이 없었던가. 그렇지는 않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현상들이 근간에 못뿔터지듯 쏟아지는가. 그와 관련하여 앞에서 소개한 사례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하여 그 내용을 알아본후 원인과 대책등을 논하기로 하자.

안면도(安眠島)핵폐기물처분장 반대운동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선희연구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간추린것("NIMBYs", 국토정보, 제9권 4호 (1991))을 다시 요약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1990년 11월 5일. 충청남도태안군안면도에 「핵폐기물연구처분장」이 들어선다는 과학기술처의 발표가 있는 직후 안면도주민 1만여명은, 「생존권과 자연생태계파괴」의 구호를 외치며 그리고 핵폐기물처분장 건설계획의 즉각취소를 요구하며, 약 1주일간에 걸친 격렬한 시위가 일어났다. 그때까지만 해도 핵물질연구기관인 「서해과학연구단지」가 조성될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또 고운 백사장과 울창한 숲등 천혜의 관광자원으로 국제관광지개발계획의 꿈에 부풀어 있었던 그곳 주민들로서는, 그런 발표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그 계획은 처음부터 비밀작전과 위장전술로 추진됐었던 것인데, 1990년 11월 9일에 열릴 예정이었던 제227차 원자력위원회(위원장 부총리)에서의 최종의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의하여 공개됐던 것이다. 고로, 주민동의는 체쳐놓고,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측과도 사전협의가 없었던 일이었다.

핵폐기물은 짧게는 300년을, 길게는 10만년이상 기간동안을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야만 안전하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인류가, 그런 미래의 지각변화나 기상변화등을 미리 완전하게 알

수없고, 따라서 그런것에 대비할 수 있는 핵폐기물 처분장설계 능력이나 시공능력을 갖고있지 않다는 점이다. 처분장은 아니지만, 유사시설인 미국의 드라마일 원자력발전소와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가 1979년과 1986년에 각기 안전사고를 냈던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결국 주민시위사건후 안면도핵폐기물처분장계획은 백지화 되었고, 과학기술처장관이 사임하므로써 이 핵프닝은 끝이 났다.

넘비현상의 원인

안면도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쏟아지고 있는 넘비사건의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그 원인으로 들수 있을것 같다. 즉,

- (1) 민주적절차의 무시
- (2) 높아진 아메니티(amenity)욕구
- (3) 잠재적위해시설에 대한 공포심
- (4) 지역이기심
- (5) 잘못 선정된 입지
- (6) 잘못 수행된 환경영향평가

그런 혐오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필요성홍보, 대상지역주민의 여론수렴, 주민의 계획 수행참여등 민주적 접근방법을 시도했어야 했는데 우리정부는 그것을 외면하고 권위주의시대의 유습인 독단과 불도저식행정을 펴서 화를 자초했던 것이다. 둘째로 국민들도 어느정도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쾌적한 주거환경, 즉 아메니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식후금강산구경」인 셈이다. 셋째로,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그전에 없었던 위해시설에 대하여 국민들이 깊은 공포심을 갖게 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오존층파괴, 산성비, 대기온난화등 지구환경의 위기가 현실로 닥쳐오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선뜻 그러한 위해시설(잠재적일망정)을 내고장에 유치하겠는가. 넷째 이 경우에도, 오늘날처럼 지배세력이 기회를 독과점하며 빈부격차를 조성하고 있는 터에, 지역주민들이 내집 내고장 땅값을 유지하려는 이기심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는가. 다섯째는, 너무 서두르고 너무 경비를 절약하려는 나머지 입지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이다. 가령 핵폐기물처분장의 경우, 원자력발전소를 계획했을 당시에 미리 무인도



같은 곳에 부지를 확보해놓고 장기간에 걸쳐 투자를 했더라면, 안면도 사건에서와 같은 주민저항을 받지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것과 관련하여, 그간의 정부가 너무 많은 국유지를 너무 일찍 함부로 팔아버린 것도 오늘날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을 어렵게 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는 그간의 평가행위가, 사업추진을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공사를 착수한 후에, 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영향평가를 했던 사례가 얼마나 많았던가.

납비현상에 대한 대책

납비현상에 대한 대책은 전항에서 적은 원인들이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한 제거작업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과 국민이 각기 자기몫의 참여를 해야할 것이다.

첫째로 정부는, 국가차원의 혐오시설건설계획을 미리 털어놓고, 장기간에 걸친 대국민홍보, 여론수렴, 대상지물색, 적절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주민의 계획참여, 대상지역주민과의 협상, 응분의 보상등 민주적절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의 응분의 보상이란, 혐오시설이 들어섬에 따른 불이익의 반대급부로서, 해당주민이 해당지역을 떠나기를 원하는 경우 언제라도 그것을 도와주는 동시에 그것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수준의 보상을 뜻한다.

둘째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현재가 지방자치시대임을 의식하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혐오시설에 의존할 수 없듯이, 스스로의 혐오시설문제를 스스로의 역내에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그러한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러한 능력이란, 역내의 건전한 여론을 넘비에 대한 강력한 대응세력으로 키우고 그것이 역내의사결정을 맡은 의회에서 대변되도록 하는 슬기를 포함한다. 한편 특별시나 직할시의 경우처럼 스스로의 지역이 협소하여 그렇게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국가차원의 조정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수밖에 없다.

셋째로, 기업의 경우는 위해물질을 덜 배출하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그리하여 스스로도 혐오시설이 되지않거니와 역내의 혐오시설에 덜 의존하는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으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경우는 공익을 개인적이익에 우선시키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양자를 동등시하는 마음가짐이 요구된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지난한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적구조가 그렇지 못하기때문이다. 고로, 개인의 부단한 극기노력과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분위기 그리고 공익을 위한 양보가 시차를 두고 언젠가는 개인에게도 간접적이익이 된다는 국가차원의 보장이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때문에, 변영하는 민주주의국가에서는 지배층과 통치자의 탁월한 지도능력이 요구된다. 국민들이 보고 따를수밖에 없는 자기희생과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정치계, 경제계, 행정부를 지배하고 지식인이 앞장서는 나라가 되어야만 국민들이 개인적이익과 함께 공익을 생각하게 될것이다. 또 그렇게 되도록 나라를 이끌어나가야만 하는 것이 통치자의 능력인줄 생각한다.(1992. 1. 25)